

# 민주 “권역별 비례제 기반 연동형 수용”...선거제 개혁 탄력

### 윤호중 사무총장 “의원 정수 유지되는 개혁안 도출 희망” 100% 연동형과 차이...평화·정의·바른미래 부정적 반응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입장을 내놓으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입장 표명으로 일단 선거제 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게 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방안은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공개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며 “비록 공약에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온 선거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세웠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를 명시했다.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야 5당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 중립적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기본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

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언급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전국단위 명부로 배정하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권역별 명부를 만들어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언급할 때 이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의석 배분을 정당득표율에 일치하는 ‘연동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윤 사무총장이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것도 이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2015년 중앙선관위 안 역시 현재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해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비례대표를 뽑자는 내용이다.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석은 제외하고 47석의 비례대표에만 정당득표율을 연계하는 ‘병립형’ 방식을 쓰고 있는데, 선거제를 개혁할 경우 ‘병립형’이 아닌 ‘연동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과 민주당이 이날 말한 ‘연동형 배분 방식’을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명칭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작동 방식이 비슷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 3당이 추구하는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입장을 밝힌 데는 이유가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세워 배분 방식에서 ‘연동의 정도’를 조절할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 발표로 선거제 개혁 논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사무총장은 “가능하면 올해 안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다지기 전에 특위안 의결돼 본회의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 1년 전에 제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엔 내놓은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판만 할 뿐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않고, 나머지 야 3당은 즉각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합의안 도출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박지경 기자 jkpark@

##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8.8%...취임후 첫 40%대 기록

### 중도층·호남지역서도 하락 민주 37.6%... 9주째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8.8%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며, 지지도는 9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정평가는 3.3%포인트 오른 45.8%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0%포인트로,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여론은 팽팽하게 엇갈리는 양상으로 급변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중도층(긍정 46.5%·부정 50.0%)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해서 우호적 태도를 보였던 50대 장년층(37.9%·57.4%)도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광주·전라(70.5%)에서 전 주에 비해 긍정평가가 8.3%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대전·세종·충청(45.6%)에서는 7.7%포인트, 경기·인천(49.2%)에서는 5.2%포인트 각각 내렸다. 부산·울산·경남(37.6%)에서는 3.7%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5.2%·57.9%)에서 하락 폭(7.0%포인트)이 가장 컸다. 20대(54.7%·38.4%)는 3.4%포인트 내렸고, 30대(56.7%·36.5%)에서도 2.7%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지지도 하락의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며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장기간 지속하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경제실패 공세 역시 국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9주째 하락, 전주보다 1.6%포인트 떨어진 37.6%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월 4주차(34.5%)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최저치다. 자유한국당은 3.3%포인트 오른 26.2%로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직전인 2016년 10월 3주차(29.6%) 이후 최고치로,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25%선을 넘어섰다.

정의당은 0.6%포인트 내린 8.2%, 바른미래당은 0.1%포인트 내린 5.9%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0%를 기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심상정 위원장 “의원정수 확대 안되면 지역구 축소 결의해야”

### “비례대표 최소 100석은 돼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29일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해 결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만약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역구 축소도 어렵다고 한다.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과 각 당의 입장을 종합하면 한국당은 현행 300명

을 기준으로 하지는 입장이고, 360~370석 안까지 나와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00석부터 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며 합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대 양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또 “비례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대 1의 비율일 때”라며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2대 1’(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 비례대표 절대 수가 100석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선거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구 의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농어촌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형의 원칙, 의원정수 확대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거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개혁 문제 역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과 함께 다루겠다고 공언하면서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확대 시 국회 예산의 현행 300명 수준 동결 ▲상설 국회 운영 ▲회계 전면 공개 등 투명한 국회 만들기 ▲국회 선진화법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후원금 모금제도, 지구당 부활 등을 정개특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

## 北철도 공동조사 南열차 서울역 출발 내달 17일까지 경의선·동해선 조사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를 위해 우리 측 열차가 30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서 환승행사를 하고 북쪽으로 향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30일부터 북한 철도 남북 공동 현지조사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라산 환승행사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추진경과 보고, 조영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축사, 기관사에게 잘 다녀오라는 의미에서 머플러를 돌려주는 출무신고 등으로 진행된다.

열차는 환승행사 뒤 곧바로 북쪽으로

남어가 경의선 개성~신의주 약 400km 구간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약 800km 구간을 다음달 17일까지 총 18일간에 걸쳐 조사한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연합뉴스

## 법무법인 | 에스&파트너스

### 광주에도 원팀(One-Team) 체제의 로펌이 출범하였습니다.

2018. 11. 1. 업무를 개시한 법무법인 에스&파트너스는 부장판사를 역임한 손진홍 변호사, 부장검사를 역임한 송길용 변호사가 하나의 팀으로 기업법무 등 송무와 자문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Needs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손진홍 변호사**  
광주 송원고, 한양대 법학과(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인천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남원시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송길용 변호사**  
광주조대부고, 조선대 법학과(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광주고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 에스&파트너스  
SONG·SON & PARTNERS

법률상담 문의. 062-229-8300  
Fax. 062-229-8301 E-mail. snp8300@naver.com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 3·4층 (지산동)

## 태양발전소 분양

###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화복·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 ABB, 독일 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 정직 · 신뢰

##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